

지방 육성책 나왔는데…‘광주전남광역연합’은 언제쯤

도의회, 출속 추진 등 이유로 예산 삭감·심의 보류 ‘판지’
광주시, 행·재정 준비 마쳐…“전향적 자세 촉구” 입장문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5극 3특’ 체제를 골자로 한 지방 육성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해당 전략의 핵심 모델인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은 좌초 위기에 처했다.

광주시가 관련 규약안을 의결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등 출범 준비를 마친 반면, 전남도의회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심의조차 보류하며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8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지방시대위원회는 광주시 등 자체체와 함께 지역 균형발전 전략 보고회를 갖고 정부 지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이번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중앙과 지방이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초광역 특별협약’ 제도를 도입해 권역별 맞춤형 지원을 제도화하고, 지방시대위원회가 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광주·전남 상생의 핵심축인 특별광역연합 출범은 사실상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 전남도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운영비 15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앞서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가 규약안이 의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영비를 삭감한 결정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예결위 심사마저 종료됨에 따라 해당 예산의 부활은 불가능해졌다.

전남도의회는 현재 ‘설명 부족’, ‘출속 추진’, ‘광역연합 불필요성’ 등의 이유를 들어 규약안 상정 자체를 미루고 있다. 당초 양 시·도는 연내 출범을 목표로 했으나, 도의회의 잇따른 제동으로 내년 초 출범마저 불투명해졌다.

반면 광주시는 이미 모든 행정적·재정적 채비를

마친 상태라 담합함을 호소하고 있다.

시는 지난 10월 24일 시의회에서 규약안을 통과 시켰고, 내년도 본예산에 운영 분담금 15억원을 반영했다.

광주시 광역협력담당관실 등에 따르면 시는 행정안전부와 규약 승인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며,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과 광역연합 운영에 필요한 조례 및 규칙안 43건의 초안 마련을 완료했다. 연합 의회 구성 등 도의회 차원의 합의가 필요한 절차만 남겨두고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끝난 셈이다.

광주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남도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시는 호남권의 미래가 달린 중장기적인 시기에 출범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특별광역연합이야말로 양 시·도의 공동 이익을 실현할 가장 확실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는 이번 연합 출범 지연이 단순한 시기의 문제를 넘어 정부의 초광역 정책인 ‘5극 3특’ 체계 내에서 호남권이 주도권을 질 기회를 스스로 걷어지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별광역연합이 출범하면 1호 사무인 ‘광주·나주 광역철도’ 구축을 비롯해 인공지능(AI) 인프라 고도화,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 조성, 군공항 이전 후속 조치 등 지역 핵심 현안 해결에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지역 소멸을 막고 상생 발전을 이루기 위해 전남도가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규약안과 예산안 처리에 대해 전남도가 조속하고 협명한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도, 지방소멸대응기금 5년 연속 최다

1648억 확보…화순·완도군 ‘우수’

전남도가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내년도에 1648억원의 대응기금을 확보하면서 5년 연속 최다 기록을 썼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는 행정안전부의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기금’ 평가에서 화순군, 완도군이 가장 높은 ‘우수’ 등급을 기록했다.

우수 등급 한 단계 아래인 ‘S’ 등급에는 고흥군, 영암군, 신안군이 선정돼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상위 등급 자체를 배출하면서 광역기금 304억원, 기초기금 1344억원을 확보했다.

올해는 기금 운용 방식이 전면 개편된 첫 해로 기존 인프라 중심 심사 방식에서 벗어나 자체체의 실제 성과를 묻는 프로그램형 사업계획 평가를 대폭 강화했다.

두 단계였던 평가 기준을 프로그램형 사업계획

추가에 따른 인센티브 도입으로 4등급으로 세분화하고 자체체별 재원 배분 격차를 줄였다.

전남도는 행안부의 평가 기준 변화에 맞춰 지역 맞춤형 사업기획, 다양한 인구정책, 실행계획의 체계성 등 여러 평가 요소에서 균형 있는 전략을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올해 평가에 대비, 도와 시·군, 전남연구원이 함께 사업 구상부터 평가 대응까지 전 과정을 공동 운영했다.

전남도는 평가자료 작성 가이드 제공, 투자계획 사전 컨설팅, 대면평가 예상 질의 대응훈련 등 실질적 지원을 통해 각 시군의 여건에 맞는 사업계획 완성을 크게 높였다.

전남도 관계자는 “청년과 가족이 머물고, 어린이 안전하게 생활하면서 새로운 전남인이 찾아오는 ‘머물고 싶은 전남’을 만들기 위해 정책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연말연시 사랑의 온기 나눠요”

광주 서구는 8일 법정 기부 주간을 맞아 서구청 1층 광장에서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사랑의 열매 배지 달기’, ‘희망2026나눔캠페인 안내’ 등을 진행하며 직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기부 문화 활성화 캠페인을 실시했다.

〈광주 서구 제공〉

두살 이내 영유아 70%가 어린이집…월 사교육비 11만원

2023년 광주·전남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자료

광주 13.9개월·전남 12.83개월에 첫 등원…일주일에 1회 사교육 및 별이·고소득 일수록 빨리 이용…학부모 34.8% ‘양육비 지원’ 선호

광주·전남 영유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문화센터 등에서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한 달 11만 원 정도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광주일보가 육아정책연구소에 의뢰해 주출한 광주·전남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 시작 평균 시기는 광주 13.9개월, 전남 12.83개월로 조사됐다.

16~23개월 조사 대상 가운데 어린이집에 다니는 비율은 광주 70.3%, 전남 66.9%로 나타났다.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은 광주 0.8%, 전남 2.3%이었다.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는 시기는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광주 38.5%·전남 56.4%)이 가장 많았다.

돌 이전에 보내는 비율은 광주 14.8%, 전남 22.2%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비율은 21.9%다.

부모의 특성을 보면 맞벌이일 때, 그리고 가구 소득이 높은 경우 좀 더 일찍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맞벌이 부부가 어린이집에 아동을 보내는

비율은 73.1%로, 허벌이(52.4%)보다 높았다. 전남지역도 맞벌이(69.4%)가 허벌이(63.0%)보다 어린이집을 더 많이 보내고 있었다.

광주에서는 가구소득이 500만원 이하일 때 돌 이전에 어린이집을 보내는 비율이 15.5%지만, 500만원이 넘을 때는 42.1%에 달했다.

어린이집 이용을 시작하는 평균 시기도 ‘300만원 이하’를 버는 가구는 15.49개월이었지만 700만원 넘게 버는 가구는 13.11개월로 상대적으로 빨랐다.

문화센터 등 기타 사교육(반일제 사교육 제외)은 광주에서 주당 평균 1.25일, 전남 1.77일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월 평균 비용은 광주 11.07만원, 전남 10.92만원으로 전국 평균 비용 10.69만원을 웃돌았다.

사교육을 이용하는 목적 1순위를 물어보니 광주에서는 ‘아이의 인자·언어 발달을 위해’가 36.9%로 가장 많았다. ‘아이의 신체 발달을 위해’(25.1%), ‘아이의 다양한 예체능적인 경험을 위해’(25.1%), ‘아이의 학습에 도움이 되기 위해’(12.9%) 등이 뒤를 이었다.

전남에서는 ‘아이의 또래 관계 경험을 위해’가 52.9%로 가장 많았고, ‘아이의 인자·언어 발달을 위해’(23.2%), ‘아이의 신체 발달을 위해’(22.9%)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은 출생률과 밀접한 연관을 가졌다. ‘2024 광주시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출산율 증가 방안 1순위로 ‘자녀 양육비, 교육비 등 지원’을 꼽은 비율이 34.8%로 가장 많았다.

노보람 전북대학교 아동학과 교수(국가교육위원회 유아교육 특별위원)는 “영어유치원이나 유명 학원에 들어가기 위한 ‘4세 고시’라는 말이 유행하는 현 세대에 비춰 보면 영유아 사교육 과열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만 3~5세 국가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이 2019년 개정된 기장 큰 취지는 영유아 발달에 맞는 방식으로 놀이를 하며 자연스럽게 교육하는 것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는 공감대가 이뤄졌지만 학부모 사이에서는 영유아기에 빨리 학습적 성과를 내는 것을 중요시하는 면모가 보인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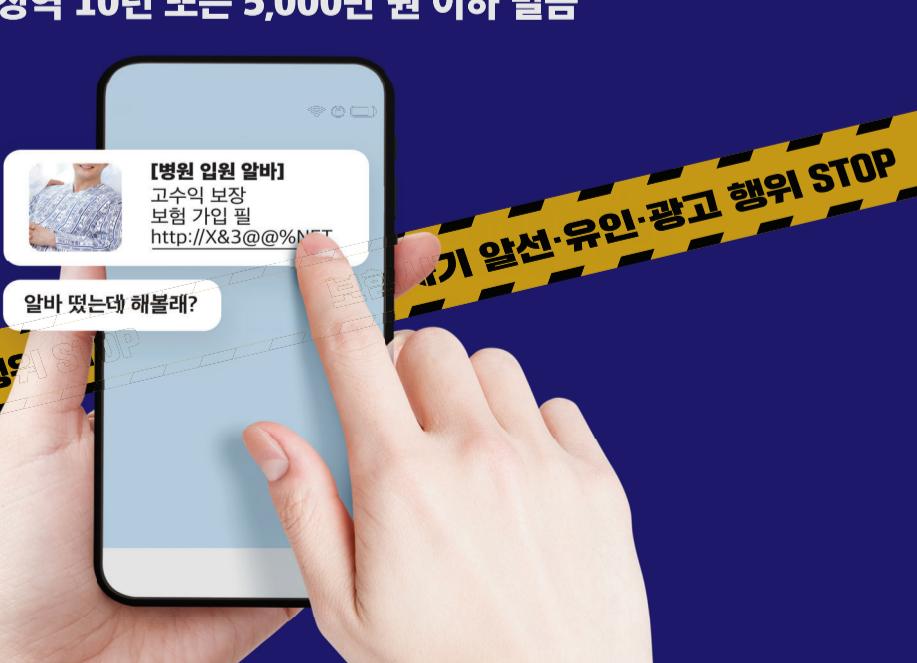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일보 유튜브
3000만 뷔 돌파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알선이란? |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이란? |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경찰청 | 금융감독원 | h-well | 삼성생명보험 | 손해보험협회 | IGAFF 보험GA협회